

동계 급수시설 국비지원 방법은 없는 것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의 식수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메인 행사장인 대관령면이 고원지대여서 저수지를 설치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올림픽지원특별법 시행령의 국비지원 대상에서 이 사안이 제외됐다.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도가 실시설계를 중단했다고 한다. 도는 차선책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라니 답답하다.

이 지역의 식수확보는 비단 동계올림픽 개최가 아니더라도 절실하다. 지난 2009년 정선 평창 태백 영월지역에서 겪은 최악의 가뭄사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해 가을부터 시작된 물 고갈현상으로 샘물조차 말라버렸었다. 급기야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로 연명했을 정도였다. 당시 정부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단과 관람객 규모를 감안하면 식수확보 대책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올림픽특구에 스포츠산업단지를 비롯해 각종 시설이 들어

서면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된다. 이를 헤아리고 지리적 조건을 따져 보면 별도의 식수전용 저수지를 건설하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 여기에 8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돼 있다. 이 중 70% 이상은 국비로 충당해야 건립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식수전용 저수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며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니 한심하다. 가뜰이나 올림픽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도에 식수확보를 위한 저수지 건립까지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정부가 이 사안을 간과해 저수지 완공시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다. 실시설계와 본 공사 시일, 물 관리 기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한 일이다. 정부의 내년도 당초예산 안에서 국비지원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2016년 말 완공마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2017년 2월 열리는 프레대회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사업은 때를 놓치면 시기가 촉박해 부실공사를 저지르게 된다.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강원 중소기업체가 한국 건설사 새로 쓴다

홍천 매일건설(주) 라이베리아 공사 확대 성과 당초금액 1.5배 1,800억 규모 내달 설계팀 투입

속보=도내 전문건설업체 최초로 해외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도로 공사를 단독수주(본부 4월2일자 1면 보도)한 홍천 매일건설(주)(대표:홍성호)이 공사규모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일건설은 최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직접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의 1개월여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제1구간의 로버트스포트 구간(42km)의

설계 및 공사대금을 6,500만달러(한화 약 730억원)로 하는 로이(LOI, letter of intent, 의향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자국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칫 내년 로버트스포트 구간에서 개최할 예정인 독립기념 행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본계약에 앞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로이 방식을 채택했

다. 본계약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나 9월 중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주건은 제2구간인 마살구간(21km)과 제3구간인 방가구간(44km)까지 합해 당초 금액의 1.5배 수준인 총 1억 6,000만달러(한화 약 1,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됐다. 매일건설은 빠르면 9월 중 설계팀을 현장으로 보낸다.

홍 대표는 "이제는 국가를 대표해 공사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해 완벽히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이무현기자 trustme@

사회적약자 조달 참여 확대

강원지방조달청이 하반기 역점 추진사항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에 나선다. 26일 강원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중·지방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등급제한입찰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으며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실적평가를 완화했다. 또 조달 발주시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통도급제, 지역업체 가점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및 지원 △중소기업 공동수급체 간 경쟁제도 적용 대상 확대 △소액수의계약 체결 시 소기업·소상공인 추천제도 실시 △강원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 확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강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광성 강원지방조달청장은 "하반기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우윤기자

道, 강원현안 대선공약화 소극적

타 시·도는 정치권 연대 발빠른 행보와 대비

대선을 앞두고 각 시·도들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선출되고 민주통합당도 4명의 후보간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다른 시·도는 '미래 5년'을 결

정지를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야 후보들에게 앞다퉀 내놓고 있다.

또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제시할 대선공약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당 지역 국회 의원들과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제시할 16개 대선공약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갖고 여론전에 나섰다.

대전시를 포함해 충남, 충북, 세종시 등 충청권 광역 시·도지사들도 지난 1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갖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통의 대선공약 마련 등을 논의했다.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은 이날 충청권 공통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등 10개를 채택했다.

민주통합당 광주시당도 강기정(광주 북구갑) 최고위원 주관으로 시당에서 경선후보 정책 담당자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18대 대선 광주발전 정책공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다른 시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 달리 도는 현안사업 대선 공약화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도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도는 내부적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10개를 정해 대선 후보와 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와 도 정치권 사이에 사전 의견교환이 없어 공약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내 의원실 한 보좌진은 "지역현안의 대선 공약화 관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치권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선국면에서 도와 도 정치권의 공동행보가 미흡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박지은

≡ 사 설 ≡

대선 공약화 보다 더 치밀하게 하라

- '3대 현안' 외 강원도 비전이 담긴 청사진 제시해야

선거인단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정식 등장해 적극 활동 중이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 역시 그러하다. 이미 여야 유력 대선 경선 후보들이 도를 방문해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럴 때마다 여야 도당은 지역의 숙원 사업을 강조하여 어지간한 사안은 후보들이 잘 알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에게 지역 현안을 알리는 까닭은 이의 대선 공약화를 위해서다.

강원도의 경우 그 중심에 이른바 '3대 과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이에서 강원도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의 문제를 살피게 된다. 열거된 과제가 강원도가 갖는 어젠다의 총체이고 종합인가 하는 얘기다. 이는 곧 강원도나 도내 18개 지자체 그리고 특히 여야 도당이 제시한 오늘의 현안만이 공약화 기대의 주체 모두인가 하는 물음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 등 '3대 현안'이 중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행히 할 과제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분권이나 지방은행 설립 문제 등을 강조해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더욱 중대한 관점은 오늘의 과제뿐 아니라 향후 강원도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 경선 주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지자체나 지구당이 분주하게 각종 건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나름 애를 쓰고, 실제로 강원도 현안의 선거공약 채택을 건의했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것이 여론과 언론을 통해 이미 다 드러난 사안의 재확인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3대 현안'을 대선 공약화하는 일이 과연 적절하고 바른 전략인지를 놓고도 갈팡질팡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발견되는 문제는 지자체나 여야 도당이 강원도 공약을 위한 고민과 고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준비 부족에다가 관점의 방향이나 층위도 그러하고, 특히 앞날을 내다보는 시각에 근본적 한계를 느끼게 된다. 대선 후보들이 전국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약 요구를 붓물처럼 받고 있는 정황에 확실한 주제와 정연한 논리를 전제하여 국가 어젠다와 연계되는 보다 큰 강원도 미래 비전을 내놔야 한다.

예컨대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5천만의 행복본부'를 발족해 공약 다듬기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도내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거나 제시한 현안은 물론 이를 넘어선 강원도 청사진의 대선 공약화에 성공하기 위해 도와 지자체 그리고 여야 도당 모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강원도가 산다.